

전자무역을 위한 통관업무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 봉 수**

-
- I. 서론
 - II. 통관업무 정보화의 변천과 최근 동향
 - III. 통관업무 정보화의 문제점
 - IV. 전자무역을 위한 통관업무의 개선 방안
 - V. 결론
-

I. 서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추세는 자료수집, 전달, 처리 및 통계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무역관리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종래 상업서류에 의한 전통적인 국제무역의 방법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기술개발과 같은 IT혁명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은 마케팅에서부터 계약, 구매, 대금 결제 및 보험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전공 조교수

등 전 무역절차에 걸친 전자무역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각국의 복잡한 통관업무가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그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다는 측면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총생산량의 약 66%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무역장벽의 철폐, 완화로 인해 교역자유화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면서 무역원활화 이슈와 같은 새로운 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이에 발맞추어 통관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번의 세관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단일창구(single window)¹⁾체제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모색하고 수출입 통관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정보화 및 과학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국가간의 인프라 구축, 전자무역 서비스의 전면 실시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는 관세청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관세청은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세관선진화 5개년 계획(CMP2010+:'06~'10)을 출범시킴으로써 관세행정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통관시스템을 Uni-Pass로 브랜드화하여 통관업무의 새로운 고객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관세청의 정보화 측면에서 전자무역을 위한 통관업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관세청 정보화의 보다 발전적 시사점을 확인하고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관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1) 통관단일창구가 구축되면 무역·물류업체는 수출입요건확인기관 등을 별도 방문 및 자료의 중복 제출 없이 단 한 번의 자료 제출로 수출입통관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2) 이대복, “대한민국 세관의 역사<IV>”,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7. 11. p.11.

먼저 통관업무 정보화의 변천과 최근 국내의 동향을 살펴본 후, 통관업무의 정보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관세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 개선 과제에 대하여 논자의 제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 통관업무 정보화 관련 논문과 저서, 관세청의 정책 추진사업 관련 보고서를 분석 도구로 삼아 고찰하는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Ⅱ. 통관업무 정보화의 개관과 최근 동향

1. 통관업무 정보화의 개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신속하고 자율적인 통관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무역규모가 증가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원활한 통관을 지속시키기 위한 과학적 통관체제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통관정책도 서류 없는 전자통관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관업무의 과학화 또는 정보화의 관점에서 변천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관업무 정보화의 변천

통관업무의 전자화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1990년대에는 ‘관세행정 EDI형 자동화 6개년(1992-1997) 종합계획’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와 정보화가 실행되었고 이어서 업체 및 유관기관 전산연계, 정보·조사·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³⁾

1996년 7월부터 관세청이 전국적인 통관 EDI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수출입 통관제도를 기존의 수출입 허가제도에서 수출입 신고제도로 개선하였다. 현재 수입통관은 수입신고에 따라 수입요건의 확인, 수입신고의 수리과

3) 장근호, “관세·통관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무역사, 한국무역협회, 2006. 11. pp.403-404.

정을 통하여 수입신고 내용이 적법할 경우 즉시 통관이 이루어지고 통관절차가 더 이상 물류흐름상의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요건과 법률적 요건만을 심사하게 된다. 출항전 수입신고나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하여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1999년 7월부터는 성실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에 대하여 전산망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결과를 전산망을 통하여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관세행정정보화 3개년 종합계획(2000), 세관 현대화 계획 추진을 위한 CMP Action Plan 검토(2005), 유비쿼터스 환경 대응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2006)을 통하여 통관 정보화를 추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세청이 갖고 있는 내·외부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CDW)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관리시스템(CKM)을 구축하고, 관세행정으로 다양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RM)를 확립하였다.⁴⁾

2003년부터는 전자 관세청을 위해 수요자 중심 정보화 환경 고도화, 관세행정 역량 강화, 전자무역 지원을 추구하였다. 기존의 EDI 방식에 추가하여 수출은 2004년 7월, 수입은 2005년 10월에 인터넷 방식이 각각 도입되었다. 기존 EDI/VAN 방식의 수출입 통관서비스 체제에서 신고시스템 구축비용과 전송료 등 과도한 비용부담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환경이 비용·효과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인터넷 수출입 신고제가 도입되었다.

2005년에는 수입요건 확인의 92%를 차지하는 식약청 등 8개 정부기관과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정부기관의 상이한 절차를 표준화하고 전산으로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세관이 각 기관과 연계하여 승인 처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물품 검사는 '수출물품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통관의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4) 관세청, 관세행정정보화백서, 2004. 1. p.15.

<표 1> 우리나라 통관업무의 정보화 변천 주요 내용

단 계	기 간	내 용
도입 초기	1978-1986	‘행정전산화 추진규정’에 의한 최초의 행정 전산화 수립(각 부처별 단위 업무 개발 및 행정전산망 기본체계 조성)
기반 조성기	1987-1996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전산망사업 추진(기관내 전산망 확대 및 관련 기관 간 정보의 공동 활용)
확대 추진기	1997-2001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한 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행정 정보 공동 활용 및 공개 촉진)
고도화기	2002-2005	‘전자정부법’에 의한 국가 정보화 사업 추진(국가 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 전자무역 정보시스템 추진)
정착기	2006-현재	‘선진 통상 국가를 실현하는 Global Top관세 행정’에 의한 u-Customs 구현(세관 선진화 계획 추진, 통관물류 통합 포털 구축)

자료: 자체정리(2008. 1)

2007년 관세청은 ‘FTA 종합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특허를 취득하였다. 또한 기존 EDI로만 신고할 수 있었던 보세화물 반출입 신고, 선용품 적재 신고, 보세판매망 판매 신고 등 각종 수입화물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통관업무의 요구사항과 정보화 성과

통관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신인 관세협력이사회가 주관하여 1999년 6월에 채택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의 일반부속서에서 제시된 표준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보기술의 도입은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자들과 가능한 한 최대한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표준화, 간소화 및 효율적 관리기법 도입을 통하여 사전에 업무혁신을 해야 한다. 셋째 세관당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입증서류 제출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자인증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요구한 정보는 공개하고 필요 정보는 제공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관세당국이 직접 입증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⁵⁾ 세관행정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정보는 공동 이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타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다른 관세행정 당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세관통제를 촉진시키는 상호 행정지원 협정의 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그동안의 통관업무 정보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올바르고 빠른 통관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수출입업체에게 향상된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높였다. 셋째 세관 방문이 필요 없는 수출입환경을 조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P/L(paperless) 심사체제를 정착시켰다. 넷째 시스템 연계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부정·불공정 무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EDI 방식에 인터넷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 인터넷 기술의 발전 및 보편화에 부응하였다.⁶⁾

2. 통관업무 정보화의 최근 동향

(1) 통관업무 정보화의 국제 논의 동향

1990년대부터 UN, WTO, WCO, APEC, ASEM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통관 업무절차 간소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기구들은 공동적으로 합법적인 무역을 준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

5)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하여 무역업자는 세관에만 신고하면 세관이 스스로 관계기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이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세당국도 검사일정을 계획할 경우에 관세당국은 이들 검사를 조정하고, 가능하면 동시에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세청, 전게서, pp.36-39.

처리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국제간 제도화를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유엔(UN) 차원의 통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UN/CEFACT 권고안은 무역서류 표준양식, 국제무역 절차와 관련된 원활화 방안, UN/EDIFACT의 사용, 전자상거래 계약, 단일창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GATT 5, 8, 10조의 명확화 및 통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WTO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주요 이슈는 크게 수출입 절차 및 요건, 신속통관,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한 전자시스템, 무역 및 통관법규의 투명성, 통관행정의 단일창구, 위험관리 등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통관절차, 평가, 품목분류, 원산지 등의 관세제도와 행정 전산화, 표준화, 세관협력 등의 기술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1999년 WCO총회에서 교토협약이 개정 채택되었으며⁷⁾ 2002년 이후에는 통관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화물정보의 사전관리 필요성의 일환으로 표준화물참고번호(UCR) 및 사전화물정보(ACI) 제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였다.⁸⁾ 또한 2005년 6월에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여행자의 국경이동 과정의 위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세관 절차를 간소하게 할 것과 수출입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 변화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무역의 안전 확보와 원활화를 위한 기본틀(Framework of Standard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을 제정하였다.⁹⁾

APEC은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2003년 신속하고 정확한 관세정보 체제 구축과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14개항의 공동실행계획에 합의하였다.

7) 교토협약의 정식 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며 우리나라는 2003년 가입기탁서를 제출하여 향후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8) 표준화물참고번호(UCR: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는 수출자의 화물이 수입자에게 최종 양도될 때까지 무역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추적 및 접속 가능한 번호를 지칭하며 사전화물(ACI: Advance Cargo Information) 제공 가이드라인은 수입지의 위험관리를 위해 수출자의 신고 및 화물에 대한 사전신고 정보 제공을 말한다.

9) 기본틀의 핵심요소는 ① 적하목록 정보의 사전입수 ② 철저한 위험관리 ③ 수입국의 요청에 의한 선적지 검사 ④ 업계의 편익 증진 등 이다.

이 공동실행계획은 개정 교토협약 원칙 준수, 서류 없는 무역, 세관간의 협력, 통관절차의 투명성, 품목분류 사전심사,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다.

<표 2> 통관업무 정보화 관련 최근 국제기구 논의 동향

	내 용
UN	2004년 ‘무역업계와 정부간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강화하기 위한 단일 창구 구축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UN/CEFACT 권고안 제33호를 제정함. 최근 권고안 제34호(단일창구 데이터 간소화), 제35호(단일창구 법률 프레임워크) 제정을 위하여 논의 중임.
WTO	1996년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술적·분석적 작업을 진행함. 2006년 한국도 단일서류접수창구, 반출시간축정, 위험관리 3개 분야에 대한 텍스트(text) 제안서를 제출함.
WCO	1999년 개정교토협약 체결됨. 2002년 표준화물참고번호(UCR), 사전화물정보(ACI)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2005년 국제무역의 안정 확보와 원활화를 위한 기본틀을 제정함.
APEC	2003년 공동실행계획(CAP)을 통하여 통관절차 분야에서 14개 개선 조치에 합의함.

자료: 자체정리(2008. 1)

(2) 통관업무 정보화의 최근 국내 추진 동향

2006년 초부터 관세청은 세관선진화 5개년 계획(CMP2010+)의 진행을 통해 2010년까지 ‘선진 통상 국가를 실현하는 Global Top 관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3대 목표(system, specialist, service), 4대 혁신(product, process, personnel, platform), 8대 전략¹⁰⁾을 수립하고 96개의 실행과제의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이를 위해 전자 관세청(e-Customs)의 구현이

10) ① 유비쿼터스 세관 실현 ② 글로벌 수준의 통상비즈니스 환경 창출 ③ 최첨단 고부가가치형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④ 관세행정시스템의 세계적 브랜드화 추진 ⑤ 파트너십 강화로 고객중심서비스 실현 ⑥ 국민 안전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의 고도화 ⑦ 위험관리 선진화로 Invisible Customs 구현 ⑧ 경영혁신모델 구축으로 인력·조직 역량 강화

라는 구호 아래 지속적인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최근 관세행정의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융합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BcN)이 구축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위해 유·무선 통합통관정보서비스와 수출입화물과 차량 관리에 전자인식태그(RFID) 도입이 추진 중이다.¹¹⁾

또한 향후 글로벌 통관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자원관리 기법의 일환으로 전사적인 정보기술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¹²⁾ 정보기술 서비스 수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서비스 관리 자동화시스템(ITSM: IT Service Management)을 구축 중이다. 더불어 관세행정 통합시스템(CDW)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 사후 감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008년도 통관 행정 주요 시책 중 통관업무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첫째 최신 IT기반의 첨단 수출입통관·물류관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관세청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관 업무에 접목하여 통관관리 및 신고를 단축·간소화해 나간다. 둘째 동북아 FTA 비즈니스 허브 실현을 위한 최적 통관지원체제를 구현한다. 셋째 남북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통관체계를 고도화하여 국제 물류보안규범 수용을 위한 수출입 통관 프로세스를 재설계한다.

Ⅲ. 통관업무 정보화의 문제점

1. 조직상의 문제점

11)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은 품질 보장형 멀티미디어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안전하게 광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네트워크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와 인식기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하는 기술이다.

12) 정보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단위 개발 사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및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과 측정시스템을 말한다.

13) 천홍욱, “최근의 통관행정 추진 성과와 2008년도 운영방향”, 계간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통권147호, 2008. 1. pp.19-22.

(1) 제도적 장치의 미비

국제관세기구(W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통관 업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대책이 아직 부족한 편이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세관 공무원의 의식과 절차의 개선보다는 컴퓨터에 의해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사고방식, 신고서류 중심의 건별 통관 절차 등이 통관업무가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주목된다.¹⁴⁾

현재의 조직체계 중 본부세관은 본청으로부터 감사·인사 등의 일부 기능을 위임 받아 외형적으로 산하세관을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선세관의 업무와 중복이 되고 있으며 일선세관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 집행을 하고 있다. 또한 통관업무가 정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 또는 주무부처에서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는 합법적 무역의 확인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활용화의 부족

관세청은 최근 통관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연구기관 및 수출입업체에서 그 축적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여 주는 수준의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각 정보시스템이 그 개발 시기가 다르고 추진 부서가 각각 다름으로 인하여 사용 환경을 통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¹⁵⁾

또한 실제 정보 분석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전략 정보가 아니고 업무 관련된 운영정보가 대부분이며 장기간 정보 분석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아울러 위험관리 전담부서가 업무 분장상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 계획이나 종합적인 관리는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 분석에 기초한 위험관리체계도 미흡한 편이며 최근

14) 강홍중, “관세행정 일류화 추진을 위한 연구”, 관세무역정책자료집,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2호, 2006, p.175.

15) 김영춘, “세계 최고 품질 관세행정 서비스의 요구”, 관세무역정책자료집,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2호, 2006, pp.182-183.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보안 시스템 적용 경험도 부족하다.

2. 운영상의 문제점

(1) 비용의 지불

통관업무의 정보화가 외형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수입 통관에 있어 무서류(paperless) 통관 비율은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 수출입업자와 관세사들은 통관업무 정보화에 발맞추어 수시로 컴퓨터 구입, 전산 및 EDI 도입으로 인한 직원교육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편 관세행정 서비스를 EDI 시스템에서 인터넷 포털(portal)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EDI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설립된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투자비 회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외부 위탁운영의 문제

정보시스템을 외부 위탁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인력의 축소에 따른 기반 약화가 지적되며 관세청내 위탁관리 직원은 아웃소싱(outsourcing) 전분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위탁관리업체 직원 보다 신기술의 습득이 낮아 관세청 직원의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¹⁶⁾

또한 현행 외부위탁업체와의 1년 단위의 계약방법이 안정적인 고급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수출입통관 자료의 보안관리 업무가 외부위탁업체로 흘러들어 갈 소지도 있다. 나아가 관세청 직원과 위탁업체간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기본적 정보 공유 및 교육이 잘 되지 않아 아웃소싱 성과를 내는데 치명적일 수 있다.

16) 관세청, 전계서, p.330.

3. 방식상의 문제점

(1) 상호인정 기능의 미비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u-Trade 플랫폼(platform)의 구축이 진행 중이며 관세청 중심으로 e-Customs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두 개의 단일창구(single window)가 존재하게 되며 이 때문에 이미 부처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생겨나고 있다.¹⁷⁾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예는 전무하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전자거래의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이 정부주도형이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전자거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인증기관 역시 민간기업인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부작용의 예로 해외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를 수신하게 되면 이를 국내에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협조체제의 부족

과거 세관행정은 개별건 처리중심의 성과와 부서별 업무처리 풍토로 인하여 부서간 협업이 약할 뿐만 아니라 세관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구하는 문화도 부족하였다. 시스템에 있어서도 개별 신고건의 단순한 계산은 이제 전산, 정보 및 지식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지능시스템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¹⁸⁾ 또한 단위업무별 시스템 개발과 시스템간 원활한 연계가 부족하고 통관 업무 정보화는 관련업계의 협조체제가 아직도 미흡하며 관련기관의 서류들은 복잡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아 입출항 절차의 일원화와 간소화를 저해한다.

17) 안병수·한민정, “한국 전자무역 Single Window의 요건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e-비즈니스학회, 제7권 제5호, 2006, pp.320-321.

18) 김영춘, “연구기관의 2007년 관세 행정에 대한 제언”,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39권 제1435호, 2007. 1. p.27.

IV. 전자무역을 위한 통관업무의 개선방안

관세청은 통관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일정한 기준과 표준화된 절차를 구현하게 되어서 업무 프로세스를 크게 개선시켰다. 아울러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 비용절감의 효과, 관세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가져왔으며 업무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선별과 선택을 통한 처리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같은 기존의 개선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기반 구조의 구현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의사결정으로 통관정보와 수출입 화물의 일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관업무 정보화의 유통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즉 2006년 9월 관세청의 정보화 전략계획의 하나인 통관업무 전반에서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융합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BcN)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위해 유무선 통합통관정보서비스와 수출입화물과 차량관리에 전자인식태그(RFID)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성공적인 통관 업무를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개별적인 유비쿼터스 행정을 경험하기 위하여 관세청 조직차원의 지원과 교육이 요구된다.¹⁹⁾

또한 향후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에서 축적된 자료를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 기업에 위탁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한 내부 전산감사나 외부 정보시스템 감리를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에 최신 정보를 공개하여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위원회나 협의체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

19) 최준호, “관세사업계의 2007년 관세행정에 대한 제언”,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39권 제1435호, 2007. 1. pp.14-15.

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수출입통관 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해 EDI 통관자동화시스템 운영을 공공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통관업무의 혁신을 위해 관세청 전담팀이 외부 전문가와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호환성의 확보

국내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 과제인 단일창구(single window)와의 중복 투자 및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 산업자원부에서 u-Trade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관세청 통관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 운영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관업무의 일원화와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가 필수적이며 무역업계, 관계기관과의 통관 정보에 대한 공동화가 요구된다.

국가간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통관업무의 개선을 위한 능력배양은 물론 정확한 진단 및 국가별 특성에 맞는 대응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지속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 특히 동아시아의 통관업무 개선 및 관련 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결과 얻어진 핵심원칙들을 적극 수용 및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특정한 관심사항들이 반영된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²⁰⁾

따라서 현실적으로 정부 대 정부의 국제협약에 의한 상호인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 대 인증기관으로 이루어진 상호인정을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이를 통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¹⁾

또한 통관업무 처리절차의 표준 매뉴얼을 전분야로 확대하여 완결함으로

20) 남상열, “통관절차 개선 및 동아시아 협력방안”,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4. 7. p.16.

21) 안병수, “수출입통관에 있어 전자문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5권 제2호, 2004, pp.17-18.

써 국제표준의 품질을 인정받아야 하며 유엔(UN)에서 선정하는 우수행정 평가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업무수행 품질 보증제를 운영함으로써 단위업무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제도와 운영 효과의 증진

신속한 통관 업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구조와 함께 건설한 법률 및 집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절차상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합법적인 통제(legitimate controls)’에 해당하며 어떤 수준이 ‘최소한 필요한(minimum necessary)’ 정도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²²⁾

한편 무역업체가 단일시스템에 정보를 전송하고 관세청과 정부기관들이 신속히 승인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와 교육 훈련 서비스를 실행단계 이전에 설정하여 시스템의 애로 사항에 대한 반응조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²³⁾

효과적인(effective) 운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객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진단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efficient) 정보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국 단위의 정보관리 보다는 국별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조직적 연계가 필요하다.

관세청의 지식관리시스템이 단순히 지식창고로서 머물지 않도록 하며 각 업무시스템에서 의사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위업무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된 지혜베이스로 성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관리전문부서 또는 전문외부기관에 위탁관리가 요구된다.²⁴⁾

22) 이남구, “WTO 무역 원활화와 논의와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 관세학회, 제6권 제1호, 2005. 2. p.153.

23) 이봉수, “전자무역을 위한 상역부문의 혁신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학회지,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1권, 2006. 8. p.150.

24) 김영춘, “위험관리 모형 개발과 관세행정 적용에 관한 실증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

4. 국내외 협력체제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세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보상체계 및 업무 환경의 개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폭 넓은 우호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향후 통관 업무를 포함한 세관행정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사업(business)과 같은 성격으로 변화 될 것 이므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세관 내 부인력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 쉬운 점은 내부적 협력 체제를 통하여 강화하고 종합적이며 반복적인 측면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입업자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간에 협력을 강화하며 실시간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 행정(governance)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세행정의 선진화 구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추진 중인 세관신고서식표준(CDM: Customs Data Model)과 같은 개정교토협약 에 의해 제시된 통관제도의 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입함으로써 타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 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재개에 대비하 여 주요 내용들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제안 내용이 국제규범에 반영되도록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최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가 추진되며 각국이 FTA체결을 확대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있어 교역량이 한층 증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전자무역도 그 범위가 넓어지고 업무처리가 보다 효율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 전자무역은 공급자관점에서 사용자관점, 시스템인프라에서 서비스인프라, 부문별 접근에서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기구에서 통관 간소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도 지금까지 신속성 측면에서는 통관시간의 단축, 효율성 측면에서는 물류비용 절감, 공정성 측면에서는 편의성을 추구하였으며 그 밖에 고객지원, 대외무역 거래질서 단속, 세관 방문 없는 수출입 환경조성, 인터넷 통관시스템 구축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²⁵⁾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방안의 보충 또는 보완측면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여러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관업무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진행사항과 추이를 살펴보고 기존 통관업무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 정보와 수출입 화물의 일치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통관업무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겠다.

둘째 관세청 통관시스템이 국내외적으로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통관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건실한 법률 및 집행체계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양질의 세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고객만족 협업 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25) 김영춘, “한국관세청 정보화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6. 5. p.77.

이상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통관 업무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세관 감시 행정의 공평한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여러 방안을 우리나라 통관체제의 틀 안에서 검토해 볼 때 관련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무역업계 및 여러 유관 분야의 적지 않은 준비가 요구된다. 향후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가 극복되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강홍중, “관세행정 일류화 추진을 위한 연구”, 「관세무역정책자료집」, 제2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 관세청, 「초일류세관 추진을 위한 관세행정 60대 혁신과제 세부 추진실적」, 2003. 12.
- 관세청, 「관세행정정보화 백서 -외부 위탁운영을 중심으로-」, 2004. 1.
- 김영춘, “세계 최고 품질 관세행정 서비스의 요구”, 「관세무역정책자료집」, 제2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 김영춘, “위험관리 모형 개발과 관세행정 적용에 관한 실증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7. 12.
- 남상열, “통관절차 개선 및 동아시아 협력방안”, 「관세와 무역」, 2004. 7.
- 안병수, “수출입통관에 있어 전자문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4.
- 안병수·한민정, “한국 전자무역 Single Window의 요건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7권 제5호, e-비즈니스학회, 2006.
- 이남규,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5. 2.
- 이대복, “대한민국 세관의 역사<IV>”,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7. 11.
- 이봉수, “전자무역을 위한 상역부문의 혁신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학회지」, 제3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8.
- 이봉수, 「무역실무」, 도서출판 두남, 2007.
- 최준호, “관세사업계의 2007년 관세행정에 대한 제언”,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7. 1.
- 한국관세사회, 「관세사회 30년사」, 2006.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11.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learance Procedure for Electronic Trade

Lee, Bong Soo

The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for improvement of clearance procedure and shows the various ways of overcoming them.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innovation of clearance procedure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s of information for customs clearance service should be built for unifying customs clearance information and imports and exports goods.

Second, Customs Service need to keep on trying continuously that customs clearance system should be inter-convertible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ird, reliable law and execution system should be needed to revitalize customs clearance business and the government need to take measures for new system which is suitable for our own country.

Finally, mutu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system for customer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should be made for supplying high quality clearance service.

As we have reviewed above contents, the customs clearance business meet the needs of innovation with new information technique to overcome lots of problems which come by when we execute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 and customs inspection administration fairly. As well as, when we review a few methods in the line of our customs system, we need strongly completion of related

system and arrangements in trade business and similar fields. Hereafter we hop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should be overcome by the process of proper inspections through subsequent studies.

Key Words : Clearance Procedure, Single Window, e-Customs